

# 고용부,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등 실노동시간 단축 팔 걷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점검단 출범  
임금감소 없이 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전환'으로 본격 이동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시키고,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후속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신설한 '워라벨+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교대제 개편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시간노동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도 동시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공정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지원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를 낮추는데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간 공용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구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1면 '정의선 새해벽두...'서 계속

## 높아진 대출문턱... 가계 수요 '은행권→2금융권' 이동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  
2금융권 4.8조 증가... 풍선효과 분석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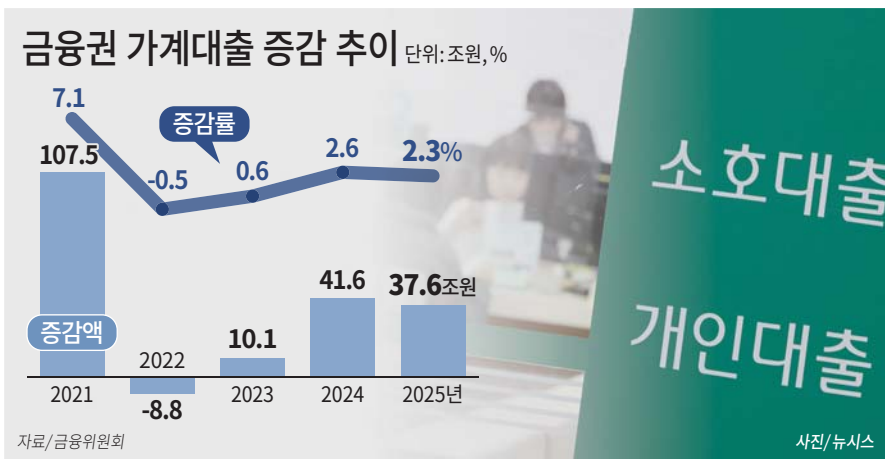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6000억원으로 1년 새 3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조원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5조원으로 1년새 32조4000억원 늘었다.

월별로 보면 주담대는 ▲6월 한달 간



5조1000억원 늘어난 뒤 ▲9월 2조5000억원 ▲10월 2조원 ▲11월 8000억원 ▲12월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700억원으로 1년간 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2023년 -14조5000억원, 2024년 -6조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과 국내외 주식투자자 인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면서도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감소한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2금융권은 지난해 1년간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2023년 -27조원, 2024년 -4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특히 상호금융은 1년새 10조5000억

원이 늘었다. 절반 가량은 새마을금고가 주도했다. 새마을금고는 1년새 5조3000억원 늘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000억원 ▲7월 7000억원 ▲8월 1000억원 ▲9월 7000억원 ▲10월 4000억원 ▲11월 5000억원 ▲12월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 1년간 3조6000억원이, 신한은 같은기간 1조5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부동산 규제 등이 나오면서 하반기를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업권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밀려난 중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정 회장 행보, 실제 성과로 올해 현대차 주가 40% ↑

세계 최대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연령 20대 후반의 젊은 인구 구조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다.

현대차그룹은 제너럴모터스(GM)의 푸네공장(25만대)을 인수해 첸나이공장(82만4000대), 아난타푸르공장(43만1000대) 등과 함께 현지 150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2024년 현대차 인도법인을 인도 증권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상장하며 현지 투자와 연구·개발(R&D) 능력도 강화했다.

앞서 정 회장은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지난 4~5일 양일간 베이징을 찾아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변하는 현지 시장을 직접 살폈다. 이 과정에서 정위원 CATL 회장, 허우치젠 시노펙 회장 등과 사업 관련 논의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쟁터'로 불리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10월 현지 전략 모델인 전기차 '일렉시오'를 출시했고, 2030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지난 6~7일에는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경영진과 면담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 자율주행차 '아이오닉5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 회장이 연초부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만큼 현대차 주가는 연초 대비 40% 가량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원을 돌파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금융위, 불법추심 초기 대응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발표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피해자는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횡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채무자 대리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에 통보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

내한다.

선임 이후라도 추심이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